

한국교육행정학회 소식지

THE NEWSLETTER

발행처 한국교육행정학회 (www.keas.or.kr) / **주소** (04175)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한신빌딩) 1615호 한국교육행정학회 사무국
발행인 반상진 / **편집인** 박선형 / **편집팀** 이승호, 채윤정, 정희중 / **E-mail** keas1967@daum.net

학회의 활동사항 및 학술대회 개최, 학회관련 업무는 홈페이지(www.keas.or.kr)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론 |

미래 교육 전망과 교육개혁의 방향

반 상 진 | 학회장,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I

우리는 시대 격변기에 살고 있다. 촛불 시민 명예혁명에 의한 시민 권력의 확대, 판문점에서의 남북 정상회담, 국 민소득 1인당 3만불 시대 돌입 등 국내 정세의 변화와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제4차 산업혁명, 저성장시대 등 예측 할 수 없는 상황들이 개인의 삶뿐 아니라 국가 전체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시대 격변기는 교육과 연동하여 위기가자 기회의 요인으로 작동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미래전망 또는 미래사고가 정교히 분석될 필요가 있다. 미래전망의 질과 과학적 정교성이 공공정책 효과나 영향력은 결정적이 기 때문이다. 당위론적으로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하는 작업은 현재 사회 변화 방식에 대한 다양한 현상과 관련 증 거를 정교하게 분석하고, 교육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전략적으로 사고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하지만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빛의 속도로 변화는 미래를 20, 30년을 이후까지 어떤 방법으로 예측하느냐도 관건이다.

이와 관련하여 OECD 사무총장 산하의 전략적 전망팀(Strategic Foresight Unit)이 불확실한 교육미래를 전략적 으로 전망하였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략적 전망은 미래 예측을 넘어서는 구조화된 접근 방식으로서, 변 화와 추세에 대한 약한 신호 규명, 대안적 미래와 중요한 불확실성 탐구, 새로운 정책 기회와 도전 과제 규명, 변화 에 대한 영향력있는 전략 개발 등으로 구성된다(EDU/EDPC, 2018). OECD가 전략적 전망팀을 통해 미래 변화 추세 와 불확실한 미래 전망을 시도한 결과는 매우 흥미로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는 OECD의 전략적 전망팀이 작성한 미래교육동향(Trends Shaping Education, 2019)¹⁾ Trends Shaping

1) Trends Shaping Education 사업은 OECD 사무총장 산하에 설치된 전략적 전망팀(Strategic Foresight Unit), 7개의 실질적인 Directorates 와 협력 기관의 전문가 등이 참여하였음.

Education 사업은 OECD 사무총장 산하에 설치된 전략적 전망팀(Strategic Foresight Unit), 7개의 실질적인 Directorates와 협력 기관의 전문가 등이 참여하였음.

보고서에서 제시한 미래전망과 미래 교육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주는 주요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기술적 변화 등 글로벌 메가트렌드(Global Mega-Trends)를 살펴보고, 이 결과가 우리 교육의 미래 전망과 개혁에 주는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II

OECD는 격년제 간행물인 미래교육동향(Trends Shaping Education) 보고서에서 제시한 미래 교육체제의 환경 변화에 영향을 주는 주요 글로벌 메가트렌드 분석 결과는 다음 [그림 1]과 같다(EDU/EDPC, 2018). 그림에서 보듯이, 교육의 미래를 형성하는데 많은 메가트렌드가 있지만, 지난 2008년 이후 10년 동안 주류 경향은 고령사회, 세계화 영향, 시민권 관련 요인이지만, 최근에는 인간의 가치와 태도 변화와 같은 현대 문화 관련 요인이 부각되고 있다.

The 2008 edition

- Ageing societies
- Global challenges
- Towards a new economic landscape
- The changing world of work and jobs
- The learning society
- ICT: the next generation
- Citizenship and the state
- Social connections and values
- Sustainable affluence

The 2010 edition

- The dynamics of globalisation
- New social challenge
- The changing world of work
- Transformation of childhood
- ICT: the next generation

The 2013 edition

- A global world
- Living well
- Labour and skill dynamics
- Modern families
- Infinite connection

The 2016 edition

- Globalisation
- The future of the nation-state
- Are cities the new countries?
- Family matters
- A brave new world

The 2019 edition

- Shifting global gravity
- Public matters
- Security in a risky world
- Ageing societies
- Modern cultures

[그림 1] Trends Shaping Education series에서 논의된 주요 동향(Trends) - 출처: EDU/EDPC(2018: 4)

특히 2019년 1월에 발간된 OECD 미래교육전망(Trends Shaping Education) 보고서에서 미래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메가트렌드는 글로벌 중산층 증가, 불평등 증가, 교육을 통한 수직이동성의 국가별 차이, 이민 증가, AI기술 발전 등이다. 그리고 2019년에 부각되는 주요 하이라이트에서 이 부분은 더욱 명료하게 제시되고 있다. 이를테면, OECD는 2019년 주요 하이라이트인 세계 중심 이동(shifting global gravity), 공공문제: 시민성과 민주주의

(public matters: citizenship and democracy), 위험세계에서 사회보안(security in a risky world), 더 오래 잘 살기(living longer, living well), 현대 문화(modern cultures) 등 5개 주제가 교육의 미래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미래 예측 전망에서 AI, IoT, big data, VR, 3D 프린터 등 초디지털(hyper-digital) 기술의 영향력은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세계 중심 이동(shifting global gravity)

세계 중심 이동(shifting global gravity) 영역에서는 크게 4가지 미래 현상을 예측하고 있다. 첫째, 세계 경제력의 중심축이 중국, 인도와 같은 거대 경제시장을 갖춘 아시아권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전세계 GDP 규모 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990년 21%에서 2016년 15%로 감소한 반면에, 중국은 1990년 4%에서 2016년에는 18%로서 미국을 상회하였다. 아시아권 국가들의 중류층이 급격히 확대되고 동시에 불평등 문제가 부각될 전망이다. 이러한 전망이 교육에 던져지는 과제는 학교교육이 노동시장에 적합한 직업교육과 평생교육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 사회경제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교육의 역할은 무엇인가, 국가간 문화감수성과 협력을 위해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등 학교교육의 기능과 역할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둘째, 글로벌 이동 확대에 따른 글로벌 시장의 판도 변화에 대한 예측이다. IT 기술발전과 항공 이용 급증 등 글로벌 교통체제 발전에 따른 사람, 재화 및 서비스 이동이 전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지식 정보의 전이가 확산되었다. 1990~2017년 사이 전세계 인구이동 수는 1.53억명에서 2.58억명으로 69% 증가하였다. 국제 교역 확대 및 인력 이동 확대 등 글로벌 이동 확대로 인해 향후 국가간 협력 경제 중심의 시장체제로 개편될 전망이다. 이러한 전망에 대한 교육적 과제는 학습결과와 자격에 대한 국제 통용성 여부, 학교교육에서 온라인 교육, 평생학습, MOOCs 등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사람들의 글로벌 이동 확대로 시민권 교육과 정체성 등을 어떻게 학교에서 가르칠 것인가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

셋째, 디지털 세계(e-planet)로 급격히 전환될 전망이다. IT 등 기술혁명에 글로벌 소비 패턴을 변화시킨다. 급격한 기술 혁명으로 끊임없는 새로운 버전의 기계 등장으로 기존의 스마트폰, 태블릿 등의 소비 교체가 급격히 진행되고, 그에 따라 새로운 혁신 기술 구입 비용 증가와 더불어 기존 기계 폐기에 따른 환경 훼손 문제가 부각될 전망이다. 이러한 전망을 고려할 때, 교육의 도전 과제는 교육을 통해 환경 문제 등 지속가능한 발전(SDG)을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넷째, 지식집약경제가 강화됨에 따라, 국가의 연구개발 능력 정도가 정책과 기업의 최우선 순위가 될 것이다. AI 등 기술혁신, 친환경 에너지 혁신 등을 위한 연구개발능력이 사회 경제적 이득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국가의 능력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의 충분한 공적 지원 여부와 고등교육의 역할과 기능이 어떻게 전환되어야 하는지가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공공문제: 시민성과 민주주의(public matters: citizenship and democracy)

지금까지 민주주의 체제의 운영 방식에 대한 급격한 변화와 요구 확대가 전망된다. 시민의 정치 참여는 직접 투표 행위보다는 소셜미디어나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한 시민 참여 확대와 시민권 강화가 진행될 것이고, 계층간·지역간 불평등 심화에 따른 정부의 권위와 신뢰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세계적 갑부 85명의

부(富)가 세계 인구의 하위 50%(약 30억명)가 지닌 부(富)의 규모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Stiglitz, 2017). Stiglitz가 지적하였듯이, 양극화, 불평등은 사회를 균열(great divide)시키는 주요인이고, 이러한 현상은 불변의 경제 법칙이 빚어낸 결과가 아닌 정책과 정치가 빚어낸 결과이다. 또한 International IDEA(2018)의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국 기준으로 시민들의 투표 참여율도 1990년대 76%에서 2000년대에는 68%로 감소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교육은 교육의 공평성(equity) 실현을 위해 영유아교육 단계부터 소외계층에게 양질의 교육을 어떻게 제공하고, 고등교육단계까지 이수할 수 있도록 어떻게 재정 지원을 확대하여야 하는지가 관건이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자신의 민주적 권리를 이해시키고, 분석적·비판적 사고와 함께 참여하는 지배구조를 제공하는 등 민주시민교육의 강화도 도전 과제이다. 아울러 성별, 인종별, 계층별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상호 역량 차이를 보상하는 교육네트워크를 지원하는 교육의 포용성(inclusiveness)을 어떻게 확대하느냐도 과제이다.

위험세계에서 보안(security in a risky world) 문제

세계화로 국경이 없는 사회로 전환되었고, 그에 따라 상호 연계 및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OECD 국가 중심으로 보안의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자연재해, 질병, 테러, 사이버 공격 등 사회적 위험요인뿐만 아니라 가계 경제 위기, 직업의 불안정성, 가족과 지역사회의 불안정성 등 개인적 위험요인도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OECD 국가들의 경우 1970~2016년 동안 가계부채는 3배 정도 증가하고 있지만 가계 저축을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위험 사회 대비 국가와 개인의 보안을 위해 학교교육에게 주어진 과제는 학생들에게 건강교육 강화, 디지털 문해력 교육 강화를 통한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비, 재정 문해력 교육 등 경제교육 강화, 환경교육 강화 등 기존의 학교 교육과정에서 크게 다루지 않았던 내용들을 어떻게 재구조화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더 오래 잘 살기(living longer, living well)

고령사회 문제는 이미 전세계적 이슈가 되었고, 그에 따라 국가마다 고령인구의 유희 노동에 따른 노동생산성 감소, 고령층의 디지털 문해력 약화에 따른 디지털 경제체제에서의 위험노출, 건강 및 복지 비용 증대, 실버 경제 확대 등 인구통계학적 문제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실질적으로 1970~2015년 동안 OECD 국가의 평균 수명은 70세에서 80세로 10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 과제로는 건강, 재정 및 디지털 문해력 등의 분야에 대한 평생학습 강화, 사회-정서적 웰빙 교육 강화, 지역교육청과 지역 보건 관련 기관과 협업을 통한 신체적 건강과 라이프사이클 관련 교육 추진, 그리고 세대간 학습교류를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의 향후 과제로 제기된다.

현대 문화(modern cultures)

향후 사회는 직업과 가족의 패턴 변화, 젠더 역할 변화 등 전반적인 삶의 문화와 패턴이 급격히 변화될 전망이다. 특히 상호 연결경제(Connected Economy)체제로 전환되는 미래 사회에서 윤리적 소비, 직장에서의 젠더 참여와 공정성 문제, 젊은 세대의 권한 강화에 따른 새로운 가족구조, Airbnb 등 공유경제 확산 등 전반적인 현대 문화가 변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현대 문화의 급격한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의 과제로 OECD는 교과중심에서 창의성, 문제해결능력, 상호 협업능력 중심의 교수학습체제로 전환의 필요성, 학생, 학부모, 교사, 행정가간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공유, 상호 신뢰 및 존경 제고, 교육현장에서 젠더, 인종 등의 차별 문화 해소 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 아울러 다양한 가족 문화를 학교교육에서 어떻게 수용하고, 정보격차 문제를 학교교육을 통해 어떻게 해소해야 하느냐도 미래 대비 교육이 안고 있는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교육리더십 실재의 조명과 교육행정가 양성체제로의 전환 탐색

우리의 현실에서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노력의 방향은 교육행정의 의의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중의 비판을 겸허히 직시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각도의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교육행정 실재의 개선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학회가 되는 것이 장기적 발전 방향의 하나가 아닌가 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올해 춘계와 연차 학술대회에서는 교육리더십과 교육행정 전문성에 초점을 맞추어 이론과 실재를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중장기적인 과제는 교육행정 리더와 실무자들의 전문성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대안이 될 수 있는 양성체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교장 등 교육행정전문가에 대한 현재의 연수 개념 접근으로는 행정전문성 미흡, 사회적 신뢰 부재, 교육발전에 대한 긍정적 역할 불인정이라는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따라서 우리 학회는 교장, 교감과 같은 단위학교의 지도자, 교육부, 교육청, 학교행정실의 실무자가 행정전문성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될 체계적·전문적 양성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관련 제도 마련의 대장정을 주도적으로 시작할 필요가 있다. 올해 학회발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학교장의 직무 전문성 표준 개발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결과를 연차 학술대회 때 발표함으로써 공론화를 시작할 계획이다.

교육 현안への 관심과 적합한 목소리 내기

교육정책은 교육현장에 큰 문제를 야기할 수도, 발전을 주도할 수도 있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지방교육자치제도, 고교평준화제도, 대학입시제도, 사교육 문제, 근래의 교육복지 논란에 이르기까지 학계의 연구와 역할을 필요로 하는 사안들이 여전히 많다. 이념 과잉의 사회적배경 속에서 학회가 또 다른 주장과 처방을 불러와 혼란을 줄까 염려하는 부분이 없지 않지만 현안에 둔감하지 않으면서 특정 프레임을 벗어나 ‘학자와 학회는 연구로 말한다’는 입장을 견지한다면 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재정·경제학회, 교육정치학회, 교원교육학회, 교육법학회 등 학문의 내용, 연구자 측면에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접학회는 물론 모학회인 교육학회, 나아가 (일반) 행정학회, 정치학회, 유아교육학회 등 타 학문 분야 학회들과의 연계·협력도 지속적으로, 그리고 보다 과감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지난 4월 20일에 한국교육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교육 관련 헌법 조항 개정의 쟁점 및 방향」 주제의 포럼도 그와 같은 노력의 일환이다. 앞으로도 포럼위원회를 중심으로 현안에 긴급히 대처하고 정책연구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연구의 결과 제시 등을 통해 정책 현안에 대한 학회 차원의 목소리를 적합한 수준에서 낼 수 있을 것이다.

III

OECD 미래교육전망(2019) 보고서에서 제시한 미래 교육 예측 변인은 이미 우리 사회에서도 논의되고 있지만, 이 보고서는 OECD 국가를 대상으로 미래 예측 변인을 추론한 만큼 무게 중심이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미래교육 예측 변인들은 우리 교육개혁 방향 설정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첫째, 향후 세계 경제력의 중심축이 아시아권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이른바 세계 중심 이동(shifting global gravity) 예측이 교육에 주는 시사점이 학습결과와 자격에 대한 국제 통용성 여부, 세계 시민권 교육,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SDG) 전략 모색, 연구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의 충분한 공적 지원 확대와 고등교육 체제 개편 등에 대한 향후 대응 과제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이러한 대응 과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서구 중심의 교육이론이나 교육개혁 전략을 벤치마킹하는 사고에서 벗어나, 한국 교육의 정체성을 중심으로 나아가 아시아권 교육문화권을 중심축으로 교육의 가치와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사고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받는다.

둘째, OECD 미래교육전망에서는 고령사회에 대한 교육적 대응의 필요성을 예측하고 있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저출산에 의한 학령인구 감소 요인도 교육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과제이다. Harry Dent(2014)는 경제 성장 예측의 선행지표로서 인구 구조 요인을 반영한 분석 결과를 보면, 경제성장과 인구구조와의 관계는 일정 부분 선진국가에서 작동되고 있었고, 한국의 경우에는 2018년을 기점으로 출생인구가 정점에 이르고 이후부터는 인구절벽(demographic cliff)의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40대 인구 감소는 노동생산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의 경우 저성장 가능성이 높은 국가로 구분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 현상을 교육의 위협요인으로 보고, 학교통폐합, 학생정원 축소, 교육재정 감축 등 축소지향적 접근을 지향하였고 아직도 그 논리에 근거하여 정책을 설계하고 있다. 하지만 인구절벽에 따른 노동의 양적 감소가 낮은 노동생산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낮아지는 노동생산성을 노동의 질 향상 전략으로 전환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교육투자 확대를 통한 노동역량 강화 전략이 유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학령인구 감소 현상을 교육의 기회요인으로 보고 교육투자 확대 및 새로운 교육생태계 발전을 위한 학교교육의 패러다임 개편 등 확산지향적 접근을 통해 장기적으로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능동적인 전략이 요구된다.

셋째, 미래 사회는 데이터가 화폐나 부동산, 지적재산권에 못지않은 자산으로 부상되면서 ‘데이터 경제(Data Economy)’ 생태계가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²⁾. 데이터는 국가현안을 해결하고 새로운 부가가치와 수요를 창출하는 핵심 자원으로 예견되고 있다. 실제로 데이터는 사회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증거기반 정책(EBP: Evidence-based policymaking) 수립을 위한 핵심 인프라이기도 하고, 나아가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하는 선제적(Ex-ante) 대안을 제시하는데 필수적인 자원이기도 하다. 데이터의 폭발적인 증가와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지능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선제적으로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데이터 강국이 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데이터기반 미래예측과 정책지원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8). 이를 위해 미래 교육환경 예측의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교육부, 시도교육청, 단위학교는 물론 한국교육개발원 등 교육연구 기관들이 서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상호 연계하여 교육현안 문제 해결 방안 모색과 미래 전망을 위한 빅데이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미래교육 혁신과 전망 예측을 위한 거버넌스와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2) 데이터를 가공, 제품, 서비스로 생산하는 디지털 데이터 시장은 696억\$(’15)에서 1,323억\$(’20)로 증가될 것이고, 데이터를 제공, 활용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서비스 시장은 1조 5,000억\$(’16)로 추정된다(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8).

결과적으로 이러한 교육미래 예측을 통해 우리가 대응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간직해 온 교육관과 교육경쟁력에 대한 가치 판단의 문제이다. 시험 성적 중심의 학력관을 가지고 우수 인재 양성을 판단하는 교육관이 미래를 고려할 때 유효한 것인지 이제는 국가적으로 고민해 봐야 한다. 그리고 우리 교육을 지배해 온 개인·학교간 경쟁 패러다임으로 교육경쟁력을 키우겠다는 전략이 미래 대비 유효한 지, 이제는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교육경쟁력이 개별 학교에서가 아닌 학교간 네트워크 및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강화되는, 이른바 공유 교육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인 교육양극화와 학교서열구조, 학력학벌구조를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측할 수 없는 미래 대비하여, 위기 요인을 최소화하고 기회의 요인을 극대화시키는 새로운 교육가치와 교육패러다임을 미래 국가 의제로 설정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점이다. 한국교육행정학회에서도 이러한 미래 교육 쟁점과 새로운 교육체제 대전환에 대해 구체적인 연구와 논의가 본격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 문헌〉

- 경제·인문사회연구회(2018). 미래예측·정책지원 시스템 사업계획(안). 국책연구기관장 및 연구단 워크숍 자료 (9. 14).
- Dent Jr., Harry S.(2015). The Demographic Cliff: How to Survive and Prosper During the Great Deflation Ahead.
- 권성희 역(2015). 2018년 인구절벽이 온다. 서울: 청림출판.
- EDU/EDPC(2018. 11). “Idea Exchange: The World and Role for Education in 2030 and 2050”, Draft Annotated Agenda: 24th session of the Education Policy Committee.
- International IDEA(2018). International Voters Turnout Database.
- OECD(2019). Trends Shaping Education 2019. OECD Publishing, Paris.
- Stiglitz, Joseph E.(2017). 거대한 불평등: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순희 역(2017). The Great Divide. 서울: 열린책들.



| 시론 |

학교조직의 다문화 친화성

함 승 환 | 한양대학교 교수

학교조직의 다문화 친화적 재구조화는 “모든 집단에서 온 학생들이 평등한 성공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학교를 변화의 단위로 개념화하고 학교환경을 구조적으로 변화시키는 것” (Banks, 2016, p. 73)을 뜻한다. 인적 교류와 이동이 국경을 넘어 빈번하게 일어나는 오늘날의 사회적 맥락에서 학교의 다문화 친화성 제고는 세계 여러 나라의 중요한 정책 아젠다이다(Cha, Gundara, Ham, & Lee, 2017). 한국사회 역시 최근 학교조직의 다문화 친화성 제고를 위해 여러 정책적·실천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고무적인 움직임이면서도 동시에 체계적인 연구가 다양한 각도에서 병행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학교를 다문화 친화적인 형태로 재구조화 하는 것은 쉬운 과정은 아니다. 학교는 여타의 관료제 조직과 달리 전문적 조직이자 이완결합 조직으로서의 성격도 함께 지니는 특수성을 띤다(Darling-Hammond, 2005; Weick, 1982). 이는 학교조직의 다문화적 역동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자생적 변화를 점진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학교조직 내의 다양한 역동은 사회적 상호작용 과정의 한 형태로서 발현되는 것이기도 하다(Dimmock & Walker, 2005). 따라서 학교조직의 다문화 친화적 재구조화 방향은 각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한 면밀한 고려를 바탕으로 설정될 때, 그 실천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은 수준에서 담보할 수 있게 된다.

학교를 하나의 사회체제로 이해한다면, 학교를 다문화 친화적으로 재구조화한다는 것은 “학교환경 전체를 개혁할 수 있는 변화 전략” (Banks, 2011, p. 29)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체제로서의 학교가 포함하는 다양한 측면들과 구성 요소들이 동시에 변화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과정이나 교육과정 자료 등을 개혁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 학교에서의 권력의 역학 관계, 교사와 학생 사이의 언어적 상호작용, 학교의 문화, ... 학교의 제도적 규범” (Banks, 2011, pp. 30-31) 등이 함께 변화해야 한다. 또한 학교교육은 사회체제의 하나로서 한 사회의 구조적 속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교의 다문화 친화적 재구조화는 거시적이며 “포괄적인 학교 개혁으로의 노력” (Nieto & Bode, 2011, p. 482)을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포괄적 학교 개혁을 위한 기본 방향성 측면에서, Nieto & Bode(2011)는 학교 개혁 노력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고 보았다. 첫째, 학교 개혁은 반인종차별적이고 반편견적이어야 한다. 둘째, 학교 개혁은 모든 학생들이 나름대로 다양한 재능과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관점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학교 개혁은 학생들로 하여금 비판적 사고 능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지향해야 한다. 넷째, 교수·학습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람들인 교사, 학생, 학부모가 학교 개혁의 논의와 실행 과정에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학교

개혁은 모든 학습자들에 대한 높은 수준의 기대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Bennett(2009)은 다문화 친화적 학교란 통합적 다원주의에 기초한 학교라고 이해한다. 즉, 학교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모든 집단의 참여와 기여를 통해 가능하다는 관점에 기초하여, 학교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관점, 가치지향, 행동양식 등에 모든 학생들을 노출시키는 등 학생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Bennett(2009)은 학생들이 서로를 더욱 잘 이해하고 집단 간의 긍정적인 관계가 진척되는 방향으로 “통합적 다원주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교사의 긍정적인 기대, 긍정적인 집단 간 접촉을 촉진하는 학습환경, 다문화적 교육과정의 세 가지 조건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p. 49)고 보았다.

보다 구체적으로, Banks(2016)는 다문화 친화적 학교의 특징을 여덟 가지로 제시한 바 있다(pp. 74-78). 첫째, 교직원들은 모든 학생에게 높은 기대수준을 가지고 그들을 사려 깊게 대한다. 둘째, 공식적 교육과정은 다양한 인종, 민족, 언어, 성, 사회계층 집단의 경험, 문화, 관점을 반영한다. 셋째, 교사의 수업은 학생들의 학습 스타일, 문화적 특징, 관심사 등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넷째, 교직원들은 학생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언어와 방언을 존중한다. 다섯째, 학교에서 사용하는 수업 교재는 다양한 문화적 관점에서 사건, 상황, 개념을 조명한다. 여섯째, 학교에서 사용되는 평가 기법과 절차가 학생들의 문화적 다양성을 잘 반영하여 학생들이 문화적으로 공정한 평가를 받는다. 일곱째, 학교 문화와 잠재적 교육과정이 문화적 다양성을 반영한다. 여덟째, 학교 상담교사들은 다양한 인종·민족·언어 집단에서 온 모든 학생들이 도전적인 진로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상의 논의들이 대체로 학교 울타리 내부의 변수에 초점을 둔 것이라면, 학교가 진정으로 다문화 친화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학교 울타리 밖의 지역사회와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힘써야 한다는 관점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Khalifa(2018)는 학교장 등 학교 리더가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함으로써 지역사회 기반 변화의 동인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주장은 학교를 개방체제로 바라보는 관점과 맞닿아 있다. 개방체제 관점에서 학교조직은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자신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역동적인 조직으로 이해된다(Scott & Davis, 2014).

학교 울타리 내에서 관찰되는 다양한 현상이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현상이 아니라 학교 울타리 안팎의 다양한 요인들과 복잡하게 관련되어 있는 현상이라고 본다면, 학교에서 마주하게 되는 문제들에 대해 해결책이나 대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개방체제 관점은 유용한 통찰을 제공한다. 개방체제 관점에서 학교의 외부 환경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접근이 있으나, 환경은 대체로 인적·물적 자원환경과 상징적 제도환경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학교를 둘러싼 사회의 사회인구학적 특징이나 언어·문화적 특징을 고려하여, 학교가 지역사회로부터 구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과 상징적 자원이 무엇인지 다각도로 파악하고, 이를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교장 등 학교 리더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Khalifa, 2018). Riehl(2000)은 그 이유와 관련하여 통찰력 있는 이론적 해석을 제공한다. 그녀는 행정적 실행(administrative practice)을 근본적으로 담화적 실행(discursive practice)으로 이해하는데, 실제로 여러 조직이론들(예컨대 organizational sense-making 이론)은 조직을 사회인지적 구성체로 보고, 의미의 구성과 공유를 조직 역동의 주요 동인으로 이해한다. 의미 구성은 특정인에 의해 독점되기보다 사회적으로 협상되고 조정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학교장 등 학교 리더는 상황을 정의하고 의미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학내 다른 구성원보다 더 큰 권한을 가지는 것 역시 사실이다. 학교 리더의 소통 역량이 중요한 이유

이다. 학내에서 다문화 친화적이고 포용적인 실천 양식들이 생겨나고 그것이 지속가능성을 갖기 위해서는, 학교 리더가 이와 관련한 새로운 의미 구성 노력에 적극 참여해야 하는 것이다.

이상 개괄한 다문화 친화적 학교의 특징을 종합하여 대략적으로 요약하면 <표 1>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표 1> 다문화 친화적 학교의 특징

교직원: 모든 학생에 대한 교직원의 높은 기대와 관심	■ 교사 등 교직원이 모든 학생에 대해 높은 기대와 관심을 지님(Banks, 2016 ; Bennett, 2009; Nieto & Bode, 2011) ■ 상담교사는 모든 학생이 도전적인 진로 목표를 추구할 수 있도록 지원함(Banks, 2016)
교육과정: 다양하고 균형 잡힌 관점에 기초한 교육과정	■ 공식 교육과정이 다양한 문화 집단의 관점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구성됨(Banks, 2016; Bennett, 2009) ■ 반인종차별적·반편견적 교육을 통해 비판적 사고 능력 계발을 지향함(Nieto & Bode, 2011)
교수·학습: 학생들의 다양한 경험과 문화적 자산 존중	■ 학생들의 다양한 경험, 언어·방언, 학습양식을 포용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됨(Banks, 2016) ■ 교사는 개별 학생의 다양한 재능과 강점을 이해함(Nieto & Bode, 2011)
평가: 문화적으로 공정한 평가 기법과 절차	■ 평가 기법과 절차가 문화적으로 치우침이 없이 공정함(Banks, 2016) ■ 평가 도구가 문화적 적절성을 갖춤(Padilla & Borsato, 2008)
학교환경: 문화적 다양성을 포용하는 학교문화와 풍토	■ 학습 환경이 문화적 포용성을 지향하고 집단 간 긍정적 접촉을 촉진함(Bennett, 2009) ■ 잠재적 교육과정이 문화적 다양성을 반영함(Banks, 2016)
의사소통: 다양한 의견 수렴을 가능하게 하는 열린 참여구조	■ 교사, 학생, 학부모 간 소통이 원활함(Nieto & Bode, 2011) ■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이 청취되고 이것이 학교 개선에 반영됨(Khalifa, 2018)
학교장: 문화감응적 리더십	■ 학교장 자신이 문화감응성을 갖추고 학내 구성원의 문화감응성 제고에 힘씀(Khalifa, 2018; Riehl, 2000) ■ 학교의 다문화 친화성 제고를 위해 인적·물적·상징적 자원을 동원함(Khalifa, 2018; Riehl, 2000)

최근 포용국가 건설이 정치적 화두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문화주의의 관점은 사회 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집단 간에 존재하는 권력의 불균등한 배분 및 체계적 차별과 배제 현상에 집중하며 사회 전반을 보다 공정하고 포용적인 방식으로 재구조화할 필요성을 역설한다(May, 2009). 문화를 단순히 어떠한 사회적 신념이나 관습의 체제

로 간주하기보다는 그러한 사회적 신념이나 관습을 가능하게 하고 정당화하는 지식과 권력의 체제로 이해한다면 (Foucault, 1984), 다문화주의는 이러한 체제에 내재하는 다양하고 복잡한 불공정성 구조를 드러내고 이의 재구조화를 모색하기 위한 하나의 이론적 관점이자 실천적 접근으로 볼 수 있다.

한국 학교조직의 다문화 친화적 재구조화는 이러한 포용의 관점에서 학교를 면밀히 재점검하고 교육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일 때 가능하다. 이와 관련한 국내 연구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다문화사회의 사회통합과 관련한 정책들이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된 지 어느덧 10여 년이 지난 현 상황에서, 이들 정책이 학교와 학생 및 지역사회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다각도의 실증적 분석과 정교한 이론화 작업이 필요하다.

〈참고 문헌〉

- Banks, J. A. (2011). 다문화교육: 특성과 목표. J. A. Banks & C. A. M. Banks (편저), *다문화교육: 현황과 전망*(제7판, 차윤경 외 역, pp. 3-37). 서울: 박학사.
- Banks, J. A. (2016). *다문화교육 입문*(제5판, 모경환 외 역).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 Bennett, C. I. (2009). *다문화교육: 이론과 실제*(김옥순 외 역). 서울: 학지사.
- Cha, Y.-K., Gundara, J., Ham, S.-H., & Lee, M. (Eds.). (2017). *Multicultural education in global perspectives: Policy and institutionalization*. Singapore: Springer.
- Darling-Hammond, L. (2005). Policy and change: Getting beyond bureaucracy. In A. Hargreaves (Ed.), *Extending educational change: International handbook of educational change* (pp. 362-387). Dordrecht, Netherlands: Springer.
- Dimmock, C., & Walker, A. (2005). *Educational leadership: Culture and diversity*. Thousand Oaks, CA: Sage.
- Foucault, M. (1984). *The Foucault reader* (edited by P. Rabinow). New York, NY: Pantheon Books.
- Khalifa, M. A. (2018). *Culturally responsive school leadership*. Cambridge, MA: Harvard Education Press.
- May, S. (2009). Critical multiculturalism and education. In J. A. Banks (Ed.), *The Routledge international companion to multicultural education* (pp. 33-48). New York, NY: Routledge.
- Nieto, S., & Bode, P. (2011). 학교 개혁과 학생의 학습: 다문화적 전망. J. A. Banks & C. A. M. Banks (편저), *다문화교육: 현황과 전망*(제7판, 차윤경 외 역, pp. 479-503). 서울: 박학사.
- Padilla, A. M., & Borsato, G. N. (2008). Issues in culturally appropriate psychoeducational assessment. In L. A. Suzuki & J. G. Ponterotto (Eds.), *Handbook of multicultural assessment: Clinical, psychological, and educational applications* (pp. 5-21).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Riehl, C. J. (2000). The principal's role in creating inclusive schools for diverse students: A review of normative, empirical, and critical literature on the practice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70(1), 55-81.

Scott, W. R., & Davis, G. F. (2014). *Organizations and organizing: Rational, natural and open systems perspectives*. London, UK: Routledge.

Weick, K. E. (1982). Administering education in loosely coupled schools. *The Phi Delta Kappan*, 63(10), 673-676.

| 시론 |



고등직업교육의 산실, 전문대학

권도희 | 연성대학교 교수

필자가 학위과정 중 처음으로 시간강의를 나간 곳은 경기도 이천에 소재한 모 전문대학이었다. 강의경력이 없는 학위과정생으로서 대학강단에 설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여 밤을 새워가며 강의안을 준비했던 설레임의 기억이 있다. 그 때 필자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전문대학’ 캠퍼스에 들어가 보았다. 그리고 그 대학에서 약 2년 동안 시간강의를 하며 나와 나의 동료들이 이제까지 직접 경험하고, 배우고, 각종 논문에서 읽어왔던 ‘고등교육기관’의 이야기와는 유사하면서도 다른 고등교육세계가 있다는 것을 체감했다. 그 안의 다양한 구성원들은 이제껏 내가 알고 있던 것과 다른 조직문화, 다른 이야기를 갖고 있었다. 그 후 필자는 2013년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경기도 안양에 소재한 전문대학에 부임하였고, ‘전문대학인’으로 생활한지 올해로 7년차가 되었다. 그 시간 동안 내부자로서 전문대학에 대한 이해는 더 높아졌지만, 전문대학에 대한 정부와 학계의 미약한 관심과 지원은 아쉬운 점으로 남아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조직으로서의 전문대학에 관심이 많지 않으며, ‘전문대학’을 별도의 목적을 가진 조직으로서 인식하기보다는 일반대학과 상이한 학력수준을 가진 고등교육기관 유형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다. 소장학자로서 이와 같은 자리에 글을 쓸 수 있는 어렵고도 감사한 기회를 통해 우리나라 전문대학의 현황을 소개하고, 필자가 느끼고 있는 안타까움을 공유하고자 한다.

전문대학의 개념 및 역할

전문대학이란 우리나라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고등교육기관이다. 좀 더 구체적인 법적근거를 살펴보면 고등교육법 제 47조에 의거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교육기관’ 유형 중 하나이다. 일반대학이 ‘심오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기관(고등교육법 제 28조)’이라면 전문대학은 전문직업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실용적 직업교육기관으로서 차별화된 정체성을 갖는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 2010년 발간한 「한국전문대학교육 30년사」에 의하면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전문대학의 역사는 1962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시작되었다. 부존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기술을 바탕으로 한 산업인력의 육성은 경제발전에 필수적이었기 때문이다(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2010: p.62). 1963년 산업교육진흥법이 제정되면서 직업교육의 내실화가 시작되었고, 전문대학은 1970년 전문학교로 시작하여, 드디어 1979년 ‘전문대학’이라는 명칭으로 개편되었다. 1979년 전문대학은 총 127개였으며, 이러한 양적 팽창의 배경에는 경제개발에 따른 직업교육의 국가적 필요성이 전제되어 있었다. 다시 말해 국가와 사회

발전에 요구되는 국가기술인력을 양성한다는 거시적 목표하에 전문대학은 출범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배경을 토대로 성장한 전문대학은 현재에도 전체 고등교육 분야에서 비율상 작지 않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대학알리미 공시자료에 의하면 전국 전문대학은 2019년 기준 총 139개로서 우리나라 전체 고등교육기관(대학원대학 제외)의 38.4%에 해당한다. 학생 규모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2018년 기준 전문대학 총 입학정원은 177,834명으로 이는 전체 고등교육기관 입학정원의 30.4%를 차지한다. 즉, 이와 같은 수치는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 5개 중 약 1.9개는 고등직업교육을 담당하고 있고, 전체 신입생 5명 중 약 1.5명은 전문대학에 진학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전문대학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역할에서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어왔다. 미국의 커뮤니티컬리지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문식 교육을 우리나라에 1996년 처음 도입하여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수행해왔다. 이는 현재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의 기저 가치와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서 특정직종, 산업에 필요한 전문적 능력개발에 역점을 두고 직무 및 산업체 맞춤형 현장실무 인재양성을 목표로 한 사업이었다. 또한 박근혜 정부시기에는 능력중심사회 여건조성을 위한 핵심기제로서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을 단기간 내에 전문대학 전체 교육과정에 적용하였고, 직업교육의 표준화를 이행해왔다. 그 과정에서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SCK; Specialized College of Korea) 정부재정지원을 받기 위해 약 100여개의 전문대학의 입학정원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7% 이상 감축(평생직업교육대학 육성사업의 경우 평균 23.8% 입학정원 감축)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입학자원 부족으로 인한 고등교육기관의 실제적 당면 통통을 분담한다는 의미로서 그 역할을 다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사농공상(士農工商) 중심의 역사적, 문화적 맥락의 영향으로 전문대학 직업교육은 여전히 실업교육, 기술교육 등의 용어로 혼재되어 사용되거나, 인문교육과 구별되어 상대적으로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에게 적합한 기능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이병규 외, 2018: p.17). 이러한 대중적 사회인식은 정부 정책수립 과정과 학계 연구흐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여지며, 그 영향은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전문대학 기능 및 역할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문대학 정부지원 현황

2009년 반값등록금 정책 시행, 2011년 고등교육법 개정 이후 대학 등록금은 실질적으로 동결되었으며, 이로 인해 최근 고등교육기관의 재정현황은 참담한 수준이다. 재정압박에 따른 대학의 건축 재정운용으로 인해 교육의 질과 대학경쟁력은 저하되고 있다. 전문대학의 실정도 여기에서 예외는 아니며, 한국사학진흥재단 대학재정알리미 2017학년도 회계결산자료에 의하면 일반대학의 전체 재정규모가 약 18.8조원인것에 비해 전문대학은 약 4.7조원에 불과하였다. 또한 일반 사립대학 교육부 재정지원금이 약 1.5조원인것에 비해 전문대학은 같은 기간 약 0.1조원을 지원받았다(국가장학금 제외). 단순한 재정규모의 차이가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학생 1인당 교육비 중 정부 공부담 비율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명확한 논리가 필요한 이슈이다. 2017학년도 교육부 재정지원금을 동일년도 총 재학생 수로 나눠보면 일반대학은 학생 1인당 약 874,281원, 전문대학은 213,935원을 수혜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직업교육을 선택한 전문대학 재학생에 대한 재정적 관점의 불평등을 정부가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재정지원 규모의 차이는 학생 개인의 불평등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전문대학 조직의 교육수준 저하로 이어지고, 이것은 다시 장기적으로 전문대학 졸업생의 사회적·경제적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이러한 실정과는 달리 고등직업교육의 선진국으로 일컬어지는 독일, 핀란드, 영국, 호주 등에서는 직업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조하여 직업교육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추세이다(최용섭 외, 2019: p.109). 또한 최근 들어 중국, 일본, 대만 등의 동아시아 국가에서도 직업교육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집중하고 있다. 중국은 올해 1월 ‘국가직업교육개혁실시방안’을 발표하고 ‘중국 2025 제조강국 실현’을 목표로 직업교육 전반에 걸친 개혁을 단행했다. 일본 역시 올해 전문직대학(4년제)과 전문직 단기대학(2·3년제)을 신설하여 직업교육 분야 복선형 학제를 완성하고자 하고 있다. 대만은 일찍이 1990년대부터 고등직업교육을 일반대학교육과 동등한 위치에 놓고 고등직업교육 분야 석·박사 학위까지 수여할 수 있는 ‘과학기술대학’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동아시아 국가의 직업교육에 대한 정부차원의 적극적 투자는 고등직업교육기관을 통해 산학밀착형 고등직업교육을 정착시켜 관련 산업분야 발전에 대한 중견인력 양성의 선도적 역할과 평생직업인 육성을 실현하고자 함이며, 이러한 움직임은 인접 국가인 우리나라의 고등직업교육에 주는 함의가 크다.

연구주제로서의 전문대학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전문대학 연구에 대한 관심은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서 ‘전문대학’, ‘고등직업교육’을 키워드로 검색하였을 때 (2019.04.30. 검색)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게재된 교육행정학, 고등교육학 분야 논문 중 전문대학 관련 주제의 논문은 단지 18편에 불과하다. 이외의 논문 주제는 세부 교육과정, 교수방법 등을 전문대학에 적용한 것으로서 주체적·조직으로서의 전문대학 특성에 관심을 갖고 있다기 보다는 특정주제의 적용대상으로서 인식하고 있다. 또한 동일 기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고등교육 관련 주제 연구는 총 19건이 시행되었으며, 이 중 전문대학을 연구대상으로 포함한 연구는 5개에 불과하다. 5개의 연구 중 3개는 교수·학습과정의 질, 신입생 실태조사와 같은 현황조사 중심의 연구이며, 나머지 2개 역시 전문대학을 구분하여 연구하였다기보다는 전체 고등교육 관련 정책 현황을 파악할 때 전문대학 영역을 포함한 형태로 파악된다. 직업교육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한국 직업능력개발원 연구 역시 NCS 교육과정, 일학습병행제 시행기관으로서의 전문대학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한국교육행정학회가 발간하는 「교육행정학연구」의 최근 136편 논문 중 전문대학을 연구범위로서 포함하고 있는 연구는 단 2건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 역시도 광범위한 고등교육 정책 내에서 포함되는 범위로서 전문대학을 다루고 있다. 전문대학 자체로서의 연구는 한국전문대학교육협회가 기본연구로서 수행하고 있는 정책연구보고서 정도가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교육행정학 관점에서의 전문대학 관련 연구는 전문대학이 전체 고등교육기관에서 담당하는 역할에 비해 양적으로 매우 미비하며, 연구주제 역시 ‘조직’으로서의 전문대학을 주체적으로 탐구하기 보다는 고등교육 정책 적용 기관으로서 대상화하여 논의를 전개하는 경향성이 강하다.

마무리하며

전문대학은 고등교육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전문직업인 양성 고등교육기관이다. 그러나 학문중심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뿌리 깊은 사회적 신뢰는 직업교육중심 전문대학을 상이한 교육 목적의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인정하지 않는 분

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사회 각 방면에서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겠으나, 학문적 측면에서도 그 역할이 있다고 보여진다.

일전에 참석한 고등교육 관련 협의회 자리에서 한 전문가께서 하신 말씀이 떠오른다. 그 분께서는 전문대학 관련 정책수립에 대한 중요성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학문적 기초연구, 특히나 전문대학 조직관점 또는 고등교육 관점에서의 연구가 미약하여 전문대학 별도의 정책수립 근거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하였다.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큰 수치심을 느꼈다. 왜냐하면 이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필자와 같이 고등직업교육 분야에 몸담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학문적 연구를 게을리 한 학자들에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학 내 유아교육학, 실기교육학을 제외한 교육학 전공이 부재하고, 교육행정 전공 학자가 충분하지 못한 전문대학에서 필자와 같은 몇몇 학자들의 노력만으로 이와 같은 갈증을 완전히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2019년은 4차 산업혁명 논의와 맞물려 주요 선진국과 주변 강대국들의 고등직업교육에 대한 투자와 움직임이 유독 크게 느껴지는 해이다. 대학교육의 효용성에 대한 질문의 최전선에 위치한 고등직업교육의 질적 성장은 개인 및 사회발전에 있어 필수적이며, 우리나라 고등교육 정체성 확립에 있어 중요한 이슈이다. 학문의 길에서 이와 같은 고등직업교육의 발전 필요성을 공감하고, 함께 논의하며, 연구할 수 있는 동료들 좀 더 많이 만날 수 있기를 고대하는 마음으로 부족한 글을 마치고자 한다.

〈참고 문헌〉

- 이병규, 손미정, 신동은, 양광호, 이해선, 조영승, 주홍석 (2019). 직업교육 체제개편을 위한 직업교육법제 정비방안. 서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부설 고등직업교육연구소.
- 최용섭, 김지범, 박주희, 윤태복 (2019). 지표분석을 통한 전문대학 교육현황(재정현황, 2015~2017). 서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부설 고등직업교육연구소.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2010). 한국전문대학교육 30년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 2019년 학회주요소식 •

1. 학술지 발행

교육행정학연구(The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는 사회과학분야의 등재학술지입니다. 2004년 이래 등재학술지 자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시 접수체제로 운영(홈페이지 접수)하고 있으니, 연구자 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권 · 호	심사접수 마감일	발간예정일
37권	1호	2019년 02월 28일
	2호	2019년 04월 30일
	3호	2019년 06월 30일
	4호	2019년 08월 31일
	5호	2019년 10월 31일

※ 문의 : 안희진 편집간사(010-3727-2826, keas1967@nate.com)

2. 회비 납부 및 학술지 발송안내

개인 회원들 연회비 선납 할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학회 운영이 건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회원들의 회비 납부를 통한 지원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에 연회비 5만원에 대해 선납 할인제도를 시행 중이며 선납 연회비는 올해 예산에 각 4만원, 4만 5천원씩 반영하고 연회비 이월 계정을 따로 만들어 내년 및 이후 연도에 각각 배정하여 미래의 회비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회원구분 및 납입기간	회비납부액	감면사항	비고
정회원	1개 년도	50,000원	해당없음
	3개 년도	135,000원	15,000원 감면 (10%에 해당)
	5개 년도	200,000원	50,000원 감면 (20%에 해당)
학생회원(석사재학생)	30,000원	해당없음	신규회원의 경우 입회비 1만원 별도
기관회원	100,000원		

※ 문의 : 정희종 부간사(010-8802-5526, keas1967@daum.net)

학술지 이메일 송부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회비를 충실히 납부해주신 회원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학회의 등재학술지 「교육행정학연구」의 전체 논문의 pdf 파일을 매 발간 즉시 이메일로 송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납부 회원에 한해 홈페이지에서 논문 내려 받기를 가능하게 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들을 검토 중입니다.

3. 학회 행사 소식

1) 2019년도 제1차 이사회 개최

가. 일 시 : 2019년 2월 22일(금) 12:00~14:00

나. 장 소 : 진진수라 평화문점

다. 참석자 : 법인 이사, 당연직 및 선임직 이사 19명, 사무국 3명, 총 21명

라. 안 건 : 2018년도 임원 및 위원회 소개, 사업계획 및 예산안 보고



2) 2019년 제1차 법인이사회 개최

가. 일 시 : 2019년 3월 8일(금) 18:00~20:00

나. 장 소 : 서울역 공항철도 역사내 명가의 뜰

다. 참석자 : 법인이사 5명, 사무국 2명 참석

라. 안 건 : 법인 정관수정 및 이사회 운영 방식 논의, 학회 공간 매입, 법인설립 취지에 맞는 활동 논의



3) 2019년 한국교육행정학회·대한교육법학회·한국교원교육학회·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한국교육정치학회 연합 학술대회 개최

시간	프로그램 안내			
09:30 ~10:10	초청 강연 ▪ 주제 : 글쓰기와 나의 성장 (강원국, 『대통령의 글쓰기』 저자) ▪ R&D센터 3층 대강당			
10:10 ~10:30	공동 개회식 ▪ 사 회 : 이승호(한국교육행정학회 사무국장, 한국교육개발원) ▪ 개회사 : 반상진(한국교육행정학회 회장,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 환영사 : 김창수(중앙대학교 총장) ▪ 공동 주최 학회 회장 인사 ▪ 장 소 : R&D센터 3층 대강당			
	한국교육정치학회 (308호)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307호)	대한교육법학회 (306호)	한국교육행정학회 윤리위원회 워크숍 (309호)
	발표 및 내용	발표 및 내용	발표 및 내용	10:30~12:30
10:30 ~13:00	개회식 ▪ 사 회 : 백선희(사무국장, 경인교대) ▪ 개회사 : 김이경(회장, 중앙대) 주제발표 및 토론 ▪ 사회 : 신철균(학술위원장, 강원대) <주제발표 1> 교육 정책 전환의 계기 마련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의 방향과 역할 ▪ 발표자 : 김진경(국가교육회의 의장) <주제발표 2>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에 관한 쟁점과 과제 ▪ 발표자 : 김성현(한국교원대) <지정토론> ▪ 배상훈(성균관대) ▪ 김영삼(서울시교육청 장학사) ▪ 이해지(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대의협력국장) ▪ 최승복(목포대 사무국장) <종합토론> 청중 질의응답	개회식 ▪ 사 회 : 이수경(사무국장, 충북대) ▪ 개회사 : 우명숙(회장, 한국교원대) 주제발표 및 토론 ▪ 사회 : 오범호(서울교대) <기조강연> 문재인 정부의 교육재정 정책 진단과 과제 ▪ 발표자 : 김병주(영남대) <주제발표 1> 문재인 정부의 학교재정 운영의 실태와 전망 ▪ 발표자 : 김민희(대구대) <주제발표 2> 문재인 정부의 고등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추계와 전망 ▪ 발표자 : 이길재(충북대) <지정토론> ▪ 이종수(충북교육청) ▪ 윤홍주(춘천교대) <종합토론> 청중 질의응답	개회식 ▪ 사 회 : 장승혁 (총무이사, 한국교육정책연구소) ▪ 개회사 : 박남기(회장, 광주교대) ▪ 공로패 및 감사패 증정 주제발표 및 토론 ▪ 사회 : 노기호(군산대) <주제발표 1> 교육안전 및 환경 관련 법제의 쟁점 및 과제 ▪ 발표자 : 김갑석(대구대학교) <주제발표 2> 돌봄 및 방과후학교 관련 법제의 쟁점 및 과제 ▪ 발표자 : 박혜경(전남교육정책연구소) <주제발표 3> 아동권리협약 이행 제고를 위한 교육법제 개선방안 ▪ 발표자 : 장민영(한국법제연구원) <지정토론> ▪ 백종운(법제처) ▪ 정필운(한국교원대학교) ▪ 황준성(한국교육개발원) ▪ 최민선(서울시교육청) ▪ 이덕남(국회입법조사처) ▪ 박신욱(경상대학교) <종합토론> 청중 질의응답	▪ 사회 : 신정철(윤리위원장, 서울대) <주제> 교육행정학 연구자의 자세와 윤리 : 학문의 자유, 정치권력, 정책연구 <패널> ▪ 이병식(연세대) ▪ 박주호(한양대) ▪ 송경오(조선대)
12:30 ~14:00	점심 (R&D센터 11층 유니버시티 클럽)			

시간	프로그램 안내		
13:30 ~18:30	한국교육행정학회 (308호)		
	13:30~15:30	한국교육행정학회 개인 연구발표 (307호)	
	발표 및 내용		
	개회식 ■ 사 회 : 김훈호(사무총장, 광주대) ■ 개회사 : 홍창남(회장, 부산대) 주제발표 및 토론 ■ 사 회 : 양성관(건국대) <주제발표 1> 2030 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교원양성체제 개편 논의 : 교원양성체제 개편에 대한 이론적 근거 ■ 발표자 : 박상완(부산대) <주제발표 2> 2030 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교원양성체제 개편 논의 : 교원양성체제 개편에 대한 주요 관련자들의 입장 ■ 발표자 : 송경오(조선대) <주제발표 3> 2030 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교원양성체제 개편 논의 : 교육전문대학원 설치를 중심으로 ■ 발표자 : 김병찬(경희대) <지정토론> ■ 고전(제주대) ■ 최진영(이화여대) <종합토론> 청중 질의응답	14:00~14:50 발표 및 내용 ■ 사 회 : 김민조(청주교대) <발표 1> 학교 현장에서 선호되는 초등학교장 지도성 특성 분류 ■ 발표자 : 오희정(한서초) 김갑성(한국교원대) <발표 2> 일본 구마모토 지진에 있어서의 <학교재개 프로세스>에 관한 고찰 ■ 발표자 : 정수연(규슈대 대학원 박사과정) 모토카네 마사히로 (규슈대학대학원 인간환경학부 교수/ 일본교육행정학회 이사·편집위원)	한국교육행정학회·일본교육행정학회·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동 주최 국제학술 심포지움 (R&D센터 3층 대강당) 15:00~18:30 발표 및 내용 Opening Ceremony ■ Moderator : Hye-Jin Kim(KEDI) Welcoming Speech : ■ Sang-Jin Ban(President, KEAS) ■ Toshiyuki OMOMO(President, JEAS) ■ Heeyeon Cho(Superintendent,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Presentation & Discussion ■ Chair : Hye-Jin Kim(KEDI) <Presentation 1> Educational Policy Making in Japan: Increasing Influence of Politics ■ Presenter : Saiko Sadahiro (Chiba University, Japan) <Presentation 2> The Finnish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 Since the 1990s: Changing Role and Relational Identity ■ Presenter : Dongseop Lee (Korea Technet Consortium, Finland) <Presentation 3> Three Major Initiatives in Higher Education by the 2016 Taiwan Tsai Administration-Self Accreditation, Higher Education Sprout Project and New Sound Bound Policy and Their Impact on Taiwan University' Governance ■ Presenter : Angela Yung Chi Hou (National Chengchi Un iversity / Higher Education Evaluation & Accreditation Council, Taiwan) <Presentation 4> Korean Model of National Board of Education ■ Presenter : Nam-gi Park (Gwa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Korea) ■ Presenter : Yang, Young yu (Senior Education Reporter, Ph.D., Joongang Daily News) <Floor Discussion> ■ Chair : Ee-gyeong Kim(Chung-Ang University)

• 연합학술대회 사진



4) 한국교육행정학회, 일본교육행정학회, 서울시 교육청 공동 주최 국제 학술 심포지움

- 한국교육행정학회, 일본교육행정학회,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동 주최 국제학술 심포지움 -

일시 : 2019. 5. 18(토) 15:00~18:30

장소 : 중앙대학교 R&D 센터 3층 대강당

프로그래

Theme: International Comparison of the Mechanism for Securing Policy Stability and Rationality at the Time of Policy Change

Opening

Schedule	Contents	
15:00 – 15:10	Welcoming Speech: Sang-Jin Ban(President, KEAS) Toshiyuki OMOMO(President, JEAS) Heeyeon Cho(Superintendent,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Moderator: Hye-Jin Kim (KEDI)
15:10 – 15:40	〈Presentation 1〉 Educational Policy Making in Japan: Increasing Influence of Politics · Presenter: Saiko Sadahiro (Chiba University, Japan)	Chair: Hye-Jin Kim (KEDI)
15:40 – 16:10	〈Presentation 2〉 The Finnish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 Since the 1990s: Changing Role and Relational Identity · Presenter: Dongseop Lee (Korea Technet Consortium, Finland)	
16:10 – 16:40	〈Presentation 3〉 Three Major Initiatives in Higher Education by the 2016 Taiwan Tsai Administration-Self Accreditation, Higher Education Sprout Project and New Sound Bound Policy and Their Impact on Taiwan University' Governance · Presenter: Angela Yung Chi Hou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 Higher Education Evaluation & Accreditation Council, Taiwan)	
16:40 – 17:00	Coffee Break	
17:00 – 17:30	〈Presentation 4〉 Korean Model of National Board of Education ·Presenter: · Nam-gi Park (Gwa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Korea) ·Presenter: Yang, Young yu (Senior Education Reporter. Ph.D., Joongang Daily News)	Chair: Hye-Jin Kim (KEDI)
17:30 – 18:20	Floor Discussion	Chair: Ee-gyeong Kim (Chung-Ang University)
18:20 – 18:30	Closing Remark Sang-Jin Ban(President, KEAS) Toshiyuki OMOMO(President, JEAS)	

• 국제 학술 심포지움 사진



5) 향후 학술대회 계획

- 하계 학술대회(→한국교육학회 연차학술대회 분과학회별 자유발표로 진행)

가. 주제 : 한국사회에서의 민주주의, 포용, 그리고 교육

나. 일시 : 2019.6.28.(금)~29(토)

다. 장소 : 서울교육대학교

라. 세션 및 발표자수 : 심포지움1개, 개인발표세션 4개 세션 16팀

- 연차 학술대회

가. 주제 : 지역변동과 교육행정의과제

나. 일시 : 2019.12.7.(토)

다. 장소 : 광주교육대학교(장소변경가능)

4. 2019년 회비납부 명단(2019년 4월 30일 기준)

1) 2018년도 3개년 회비 납부자 명단(4명)

김경희, 김동석, 박해경, 신철균

2) 2018년도 5개년 회비 납부자 명단(16명)

고전, 김재용, 박남기, 박선행, 서재영, 양성관, 염민호, 유동훈, 이광현, 이석열, 이수정, 이정로, 이희숙, 정제영, 채정관, 최창섭

3) 2019년도 3개년 회비 납부자 명단(1명)

김용련

4) 2019년도 5개년 회비 납부자 명단(11명)

고득환, 김병주, 김양선, 김현숙, 박영숙, 오범호, 이인희, 이정미, 정수현, 조혜윤, 채현우

5) 2019년 신입회원 회비납부자 명단(35명)

고유주, 김도영, 김보름, 김성천, 김연구, 김진영, 김옥자, 권순범, 김수진, 김영선, 김창현, 김한경, 김한나, 김현철, 김효정, 모영민, 박은주, 박소영, 손다정, 송인영, 신혜원, 양수진, 양정숙, 오은석, 오희정, 왕정원, 이미희, 이종원, 이은주, 이한나, 이해니, 임후남, 차지철, 채윤정, YAN XICHEN

6) 2019년 기존회원 회비납부자 명단(90명)

강은숙, 강호수, 박주철, 권초아, 권희청, 김덕희, 김도기, 김민규, 김병찬, 김성열, 김세정, 김세영, 김솔, 김영식, 김영식, 김이경, 김익형, 김은수, 김정희, 김제현, 김지선, 김지연, 김지현, 김지하, 김진원, 김정아, 김혜진, 나윤진, 문보은, 박수미, 박혜연, 박혜연, 박경호, 박세진, 박수정, 박철웅, 박희진, 백규호, 손성욱, 송승익, 신재흡, 신하균, 신혜진, 심용섭, 양민석, 엄문영, 오수정, 오예진, 우원재, 유경훈, 유길한, 윤기현, 윤정인, 이동엽, 이상철, 이쌍철, 이수진, 이승일, 이영은, 이인수, 이재덕, 이정기, 이정진, 이창수, 이혜나, 이희수, 임수영, 장귀덕, 장덕호, 장수연, 정묘진, 전수빈, 정혜림, 전재은, 조규승, 조미애, 조석훈, 조성영, 조영하, 조옥경, 주현준, 채송화, 최재원, 최지원, 최원석, 하봉운, 하상교, 함승환, 함은혜, 홍성환, 황재운

7) 2019년 이사회비 납부자 명단(8명)

김병찬, 김정희, 나민주, 박경호, 박영숙, 오범호, 정수현, 조영하

8) 2019년 기관회비 납부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북교육정책연구소

※ 연회비 또는 이사회비를 납부하셨으나 명단에 기재가 되지 않은 경우, 학회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중 부간사, 010-8802-5526, keas1967@daum.net)

5. 제47대 한국교육행정학회 임원

■ 회장단

- 회 장 : 반상진(KEDI)
- 부 회 장 : 박남기(광주교육대학교)
- 감 사 : 엄문영(서울대학교), 오범호(서울교육대학교)

■ 이사회

• 당연직 이사 32명

김영식, 신극별, 신철순, 김명한, 남정걸, 이형행, 강영삼, 윤정일, 신중식, 곽영우, 한경수, 김신복, 주삼환, 이종재, 서정화, 노종희, 강무섭, 강인수, 박종렬, 정영수, 김명수, 신재철, 송광용, 임연기, 허병기, 이윤식, 박세훈, 김성열, 신현석, 주철안, 김혜숙, 반상진

• 선임직 이사 60명

고 전(제주대) 고장완(성균관대) 김 용(청주교대) 김갑성(한국교원대) 김규태(계명대) 김달효(동아대) 김도기(한국교원대) 김민희(대구대) 김병찬(경희대) 김왕준(경인교대) 김용련(한국외대) 김이경(중앙대) 김재웅(서강대) 김정희(대교협) 김홍주(세명대) 나민주(충북대) 남수경(강원대) 박경호(KEDI) 박균열 (KEDI) 박삼철(단국대) 박상완(부산교대) 박선형(동국대) 박영숙(KEDI) 박종필 (전주교대) 박주호(한양대) 백정하(대교협) 변기용(고려대) 성병창(부산교대) 송경오(조선대) 송기창(숙명여대) 신재흡(한성대) 신정철(서울대) 신철균(강원대) 안선희(중부대) 양성관(간국대) 염민호(전남대) 오범호(서울교대) 유길한(진주교대) 윤홍주(춘천교대) 이길재(충북대) 이덕난(국회입법조사처) 이병환(순천대) 이석열(남서울대) 이수정(단국대) 이정기(백석대) 이필남(홍익대) 장덕호 (상명대) 전제상(공주교대) 정대범(진주보건대) 정성수(대구교대) 정수현(서울교대) 정재균(전북교육청) 조영하(경희대) 차성현(전남대) 천세영(충남대) 최정윤(KEDI) 최준렬(공주대) 최창섭(강릉원주대) 하봉운(경기대) 홍창남(부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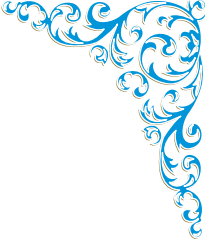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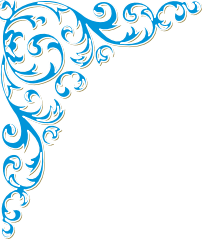
■ 분과위원회 구성

분과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기획·홍보 위원회	박선형 (동국대)	백정하 (대교협)	김규태(계명대) 박균열(KEDI) 박삼철(단국대) 변수연(부산외대) 조영하(경희대) 함승환(한양대)
학술위원회	김용 (창주교대)	박수정 (충남대)	이광현(부산교대) 박희진(KEDI) 이필남(홍익대) 이정기(백석대) 이수정(단국대) 정재균(전북교육청)
편집위원회	김병찬 (경희대)	송경오 (조선대)	김왕준(경인교대) 박소영(숙명여대) 박인심(서울여대) 신철균(강원대) 유경훈(KEDI) 이석열(남서울대) 이정미(충북대) 정바울(서울교대) 주영효(경상대)
영문편집 위원회	이길재 (충북대)	김용련 (한국외대)	강호수(경기도교육연구원) 김영식(경남대) 엄문영(서울대) 정성수(대구교대) 차지철(한국지방교육연구소) 최원석(KEDI)
국제학술 위원회	최정윤 (KEDI)	김혜진 (KEDI)	김선주(강남대) 신혜진(MUREPA) 전재은(한국외대) 채재은(가천대)
학회발전 위원회	윤홍주 (춘천교대)	오범호 (서울교대)	권순형(KEDI) 이선호(KEDI) 이재덕(KEDI) 차성현(전남대)
조직규정 위원회	신철균 (강원대)	이덕난 (회입법 조사관)	김성천(한국교원대) 김현진(국민대) 이동엽(KEDI) 이호준(KEDI)
재정기금 위원회	하봉운 (경기대)	박상욱 (동의대)	김동훈(육아정책연구소) 김민희(대구대) 박경호(KEDI) 장덕호(상명대)
학술편찬 위원회	김달호 (동아대)	채재은 (가천대)	강낙원(대학교육협의회) 이상철(부산시교육정책연구소) 이쌍철(KEDI) 이호섭(숙명여대)
윤리위원회	신정철 (서울대)	이병식 (연세대)	고장완(성균관대) 김도기(한국교원대) 박주호(한양대) 이필남(홍익대) 조석훈(가천대)
정책연구 위원회	성병창 (부산교대)	홍창남 (부산대)	김순남(신한대) 김희규(신라대) 이병환(순천대) 이상철(부산시교육정책연구소) 이쌍철(KEDI) 이일권(한국외대)
포럼운영 위원회	염민호 (전남대)	박소영 (숙명여대)	강석(전남대) 김훈호(공주대) 장효훈(세종시보람중) 정동욱(서울대) 주현준(대구교대) 최나리(위덕대)
부회장선출 위원회	양성관 (건국대)	박종필 (전주교대)	유동훈(하나고) 이광현(부산교대) 이석열(남서울대) 정바울(서울교대)
소석논문상 위원회	강영삼 (전 국민대)	주삼환 (전 충남대)	강무섭(전 강남대) 강인수(전 수원대) 김해숙(연세대) 노종희(전 한양대) 서정화(홍익대) 신중식(전 국민대) 이종재(전 서울대)
주삼환 교육리더십상 위원회	정영수 (충북대)	김성열 (경남대)	김병윤(대전교육청) 김용남(KEDI) 신봉섭(나사렛대) 신현석(고려대) 이명주(공주교대) 이선호(KEDI) 주철안(부산대)

6. 제 47대 사무국 소개

제47대 사무국이 새롭게 구성되어 2019년 동안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관심과 조연을 부탁드립니다.

한국교육행정학회		홈페이지 : http://www.keas.or.kr E-Mail : keas1967@daum.net
학회	주소	(04175)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 (한신빌딩) 1615호 한국교육행정학회 사무국
사무국장	성명	이승호(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shlee@kedi.re.kr)
간사	성명	총무간사: 채운정(동국대학교) -업무: 학회 및 학술대회 총괄업무 -keas1967@daum.net, 010-9189-2837 총무부간사: 정희중(전북대학교) -업무: 회원 및 회비 납부관리, 연구재단 관련업무 -keas1967@daum.net, 010-8802-5526 편집간사: 안희진(경희대학교) -업무: 교육행정학연구 투고 및 발간 관련 업무 -keas1967@nate.com, 010-3727-28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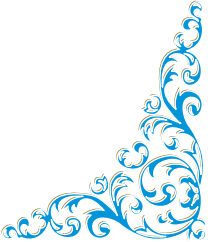


한국교육행정학회 윤리 헌장

한국교육행정학회 윤리헌장은 회원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본 학회는 물론 회원 개인의 윤리성을 고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다음의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 ① 회원은 학회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성실하게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회원은 학회 활동을 통하여 교육행정학과 한국교육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고 공익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③ 회원은 학술활동 관련 법률 및 학회 윤리규정, 학계에서 권장하는 기본적인 연구 학술 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④ 회원은 타인의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아니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 ⑤ 연구관련 심사 및 자문을 하는 회원은 학문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제출자와 제출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⑥ 회원은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득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 회원은 연구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 ⑧ 회원은 학술활동 관련 연구대상자 및 연구보조자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2007. 4. 27



한국교육행정학회